

한일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2019 한일관계의 해법 모색

- 3 <권두논문> 수출관리 교섭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
사이토 고스케 (요코하마국립대학 특임준교수)
- 13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와 2019년 한일 갈등
이정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 25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일갈등의 구조, 전망
손 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35 대결로 치닫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와 2019년 한일 갈등

이정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 속에서는, 일본의 대한정책에 대한 정책기조를 역사수정주의 세력과 평화주의 세력의 양분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2019년 7월과 8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의 엄격화'로 부르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근간에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적 정책 기조에 입각한 역사 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한국사회에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은 정치인 아베의 역사 인식과 일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베 정권은 2015년 아베 담화를 기점으로 국제주의에 입각한 역사 정책을 추구하여왔고, 이를 통해 '국제질서' 개념을 일본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으려 추구하였다.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는 아베의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을 우려하며 실용주의적 외교를 지향하는 일본 국내의 보수리버럴과 중도세력에게 안도감을 주며 이들의 아베 정권 외교에 대한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2019년 한일 갈등에 대한 일본 내 담론 구조에서 혐한론과 역사수정주의가 아닌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한국'의 반한 담론이 광범위하다. 하지만 일본 보수중도가 지지하고 아베 정권이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 국제주의 외교는 '국제질서'의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이익에 따른 전략적 계산에 입각한 외교 정책들에 대해서 정당화 수단이 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현재 국제주의의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지지하는 일본 내 보수중도 세력에게는 실용주의적 성향이 여전히 강하고, 따라서 외교적 협상으로 양국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일본 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일갈등의 구조, 전망

손 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2010년대 국제질서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기로서 민족주의 및 포퓰리즘이 부흥하고, 반자유주의적 규제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혼란상태라는 지구적 차원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아베 정부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 일본의 상대적 쇠퇴에 대해 민족주의적 전통에서 서서 과거 제국의 영광을 추억하고 재현하려는 복고적 정체성 정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저항 민족주의에 일종의 존재론적 불안과 위협을 초래하여, 두 민족주의 간 충돌을 초래하였다. 현 한일 간 갈등은 이러한 정체성 충돌의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은 장기화될 것이다. 한국은 자유주의 규칙기반 질서 수호 차원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이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외교가 국제적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모범국으로서 행동을 보여야 한다.

대결로 치닫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2019년 9월 현재 한일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구조적으로는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의 지각변동과 더불어 양자관계의 성격이 수직적인 데서 수평적인 관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한일 양국의 정권이 지향하는 국가정체성 차이와 상대방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저하되는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양국관계를 벼랑으로 내모는 요인을 제공한 것은 대법원의 징용재판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과 분노로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의 보복에 나섬으로써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는 징용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해법에는 기금방식의 대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물질 배상포기 선언 등의 방법이 존재하며 각 선택지는 나름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익과 전략의 관점에서 징용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권두논문〉

수출관리 교섭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

사이토 고스케 (요코하마국립대학 특임준교수)

들어가며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제도 운용 엄격화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특정 품목(불화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카테고리 변경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의 우려로 인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입장이며 공식적으로 이 조치를 다른 이슈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징용공 문제로 인해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며, 일본의 조치를 한국의 대응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보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일 양국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피하고자 한다. 원래 국가 간의 관계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케이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항상 정확하게 발신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이를 받아들이는 측 또한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한일 양국 간 대립 상황은 국내의 정치 사정과 다양한 미디어 보도의 영향이 인식의 차이를 확대시켜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미중 갈등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수단을 더 큰 국익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시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수출관리라는 안보와 경제의 접점에 있는 사안이 쟁점화되면서 한일 간의 대립이 이와 같은 필터를 통해 해석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다양한 안건을 협상 카드로 연관지어 버리는 것은 양측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영향력 행사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소재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일 양국의 협상 자세와 그 배후에 있는 이해 구조에 주목하면서 각각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주장이 가지

는 국제정치적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냉전 이후 동아시아 세력관계의 변화

오늘날 한일 관계에서 수출관리의 문제가 이렇게 큰 쟁점이 된 배경에는 한국이 냉전 이후 경험한 성장과 그로 인해 발생한 동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과 역할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통계를 보면, 냉전 종식 전후의 한일 양국 군사비는 2~3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하던 것이 현재는 양국의 지출이 거의 맞먹을 정도에 이르렀다. 물론 금액을 기준으로 모든 능력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한국이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협력 상대임에는 틀림없다 하겠다.

경제 관계로 눈을 돌려 보면, 한일 간의 무역액수는 2001~2018년 사이에 수출입이 모두 2배 정도 증가하고, 서로 간에 거래 상대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무역 점유율의 양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통계를 보면, 같은 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 점유율이 6~7% 내외, 수입 점유율이 4~5%로 두드러진 변화는 없는 반면, 지난 10여 년간 한국 수출의 20~25%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중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시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은 일본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곧바로 한일 양국의 협상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며, 요즘 미디어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처럼 이기고 지는 ‘승패’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 역시 아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한일 간의 무역과 안보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상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국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위협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관리체제의 강화 자체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수출관리를 둘러싼 쟁점의 연계와 분리

일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그 이유로 요즘 거론되는 것이 수출관리를 통해 전략물자가 북한과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 문제이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 일본은 한국을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을 경유한 불법 수출이 발생하고 이것이 중국과 북한의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간접적으로 일본에 대한 위협이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할 것이다. 일본 또한 수출관리체제 위반으로 미국이 강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경위를 거쳐 현재와 같은 수출관리체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987년에 발생한 도시바 기계의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위반사건은 전략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컸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에 대한 의식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법적인 기술이전을 막기 위하여 일본이 수출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일본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수출관리망의 허점을 파고드는 국가가 있으면 국제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일본은 다른 나라의 수출관리체제 강화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수출관리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태도는 반드시 현재의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냉전 종식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수출관리 정책은 동남아 지역을 비롯한 다수 국가를 포함시키는 형태로 강화해 오고 있으며, 민군양용기술(Dual-Use Technology)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이러한 활동은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징용공 문제와 수출관리 문제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시간상으로 보면 일본은 한국에서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나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를 ‘보복’이라는 형태의 인과 관계로 보는 한편,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경우, 향후 한국 정부가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주장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로 인하여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상의 조치를 철회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논의의 핵심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개선될 것인가에 집약된다.

협상 카드로서의 GSOMIA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현재 한일 간 수출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제기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거부라는 옵션이 협상 카드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이다. 우선 안보상의 영향이다. 일본은 틀림없이 GSOMIA가 안보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협력 채널이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GSOMIA 체결과 관련해서는 2011년 일본 민주당 정권 하에서 한국과의 공식적인 협의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 정세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2019년에 들어와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당시와 비교하더라도 동아시아의 안보 정세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그다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과 미국에도 해당된다는 점은 한국이 꺼내든 GSOMIA 이탈이라는 카드의 유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만약 각국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위협 인식이 (일본을 둘러싼 국내 정치 감정의 악화는 차치하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GSOMIA는 한국에게도 마찬가지로 당장의 안보를 확보하는 데 계속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미국이 처한 상황 또한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의 안정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포석이라는 관점에서 한일 간의 안보협력 강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서 본다면 미국도 역시 한일 양국 중에서 어느 쪽에 양보를 요구할 것인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GSOMIA 파기에는 반대일 것이며 실제로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도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 인식이 옳다고 한다면, 한국이 GSOMIA 파기를 언급하는 것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GSOMIA 파기라는 협상카드는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한국 또한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협상카드로서의 설득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체제 유지가 한국에게 여전히 중요한 정책 목표라면 (즉, 북한과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되는 것을 의도하는 게 아니라면) 수출관리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 썩기를 박는 것과 같은 이러한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한일 협상에 있어서도 수출관리의 엄격화와 GSOMIA 연장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으며 ‘설

명 가능한 거래'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현실주의적 이익과 정치적 현실

한일 양국에게는 북한에 대한 대처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안정, 경제적 상호 의존의 심화와 산업의 활성화, 미국 등과의 우호적 관계 등 분명히 '현상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 교류의 정체와 안보 환경의 악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양측 모두에게 과거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에 대해 미국이 제기하는 것처럼 국내 정치 사정을 배제한 현실주의적인 정답은 협력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정치를 무시하는 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8월 2일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것을 각 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였다(보다 구체적으로는 '백색국가'라는 통칭 자체를 폐지하고 그룹A에서 그룹B로 변경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2일 일본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양국 간에 '보복'의 연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양국이 비로소 수출관리제도라는 문제를 전제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 단계에서는 향후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과 24일 연장 기한을 앞둔 GSOMIA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여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협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내정치의 향방에 주목하면서 양국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이해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것이 어떻게 협상에 반영되어 가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9년 8월 17일 탈고]

❖ 저자 약력

■ 사이트 고스케

現 요코하마국립대학 연구추진기구 특임준교수. 쓰쿠바대 인문사회과학연구과 국제정치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전공분야는 국제정치학, 안보보장론, 과학기술과 정치. 주요 저서에 『軍備の政治学—制約のダイナミクスと米国の政策選択』(白桃書房, 2017年), 『デュアルユースの政治論—科学研究と安全保障はいかに向き合うか』 『安全保障の位相角』(共著, 法律文化社, 2018年), 『日本外交の論点』(共編著, 法律文化社, 2018年) 등이 있음.

<巻頭論文>

輸出管理交渉をめぐる日韓の利害

齊藤孝祐 (横浜国立大学 特任准教授)

はじめに

2019年7月1日、日本の経済産業省は韓国に対する輸出管理について、制度運用の厳格化を発表した。そこでは、特定品目（フッ化ポリイミド、レジスト、フッ化水素）の包括輸出許可から個別輸出許可への切り替えを行うと同時に、韓国の輸出管理カテゴリーを変更す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た。日本政府はこの措置を安全保障上の懸念に基づく制度的対応として位置づけており、公式には他のイシューと論理的に関連づける姿勢は見せていない。これに対して、韓国政府は元徴用工問題との関連でこのような措置が取られたという立場をとり、日本による輸出管理の厳格化を韓国の動きに対する「経済報復」とみていることが報道されてきた。

本稿では日韓双方の主張のどちらが正しいのかという点は論じないが、もとより、国家間関係に限らず、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いては常に正確にメッセージが発信されるわけでもなければ、受け取り手側が正しく意図を解釈する保証もない。特に今日の日韓対立においては、国内政治状況やさまざまなメディア報道の影響が、認識のズレを拡大してきたようにも見える。また、経済的手段をより大きな国益実現のための手段として用いることの是非が米中対立の長期化を通じて広く問われるようになる中、輸出管理という安全保障と経済の結節点にある案件が争点化したことによって、日韓の対立もそのようなフィルターを通して解釈されている側面もあるのかもしれない。

しかし、こうした認識のズレを伴ったまま、さまざまな案件が交渉のカードとして関連づけられてしまうことは、相互に問題解決に向けた影響力の行使を困難なものにするだけでなく、本来の問題の所在をより一層不明瞭なものにしてしまうことにもつながるだろう。本稿では部分的にはあるが、交渉スタンスやその背景にある利害構造を踏まえながら、それぞれの立場から展開される主張の国際政治的な意味と影響力について考察していく。

冷戦後の東アジアにおける力関係の変化

今日の日韓関係において、輸出管理の問題がこれほど大きな争点となった背景のひとつには、韓国が冷戦後に経験した成長と、それによって生じた東アジアにおけるパワーバランスや役割の変化がある。たとえば、ストックホルム国際平和研究所(SIPRI)の統計を見てみると、冷戦終焉前後には日韓の軍事費には2-3倍程度の差があった。それが現在では、両者の支出はほぼ拮抗しつつある。もちろん金額ベースですべての能力を比較できるわけではないが、特に中国や北朝鮮といった脅威に直面しつつも財政的に厳しい状況に置かれた日本にとっては、現在の韓国が軍事的な面で無視しえない協力相手となっ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だろう。

経済関係に目を向けてみると、日韓の貿易額は2001-2018年間で輸出入ともに2倍前後まで増加しており、相互に取引相手としての重要性が大きく高まってい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しかし貿易シェアの様相は大きく変化している。日本貿易振興機構(JETRO)の統計を見ると、同年間、日本の対韓国輸出シェアが6-7%前後、輸入シェアが4-5%とそれほど大きく変化していないのに対して、現在の韓国にとって最も重要な市場となっているのは中国であり、この10年あまり韓国の輸出の20-25%前後が同国に求め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ことがわかる。そういった意味で、韓国にとって日本の存在が相対的に「軽く」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は、日本でも指摘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

こうした状況が直ちに日韓それぞれの交渉力を示す指標となるわけでもなければ、近年一般に、あるいはメディアでしばしば語られるような「勝ち負け」の問題に結びつくわけでもない。しかし、今回のように日韓の貿易や安全保障協力を影響を及ぼしうる政策選択が行われる際には、韓国が国内経済への影響を懸念するのと同様に、日本もまた、何らかのかたちで自国の利益を損なうリスクを抱えう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それは言い換えれば、日本にとっては輸出管理体制の強化それ自体が、それなりの対価を支払うに値する問題提起となりうるということでもある。

輸出管理をめぐる争点の連繋と分離

日本においては、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輸出管理の強化は非常に重要な政策課題のひとつとなっている。その理由として近年挙げられるのが、輸

出管理による北朝鮮や中国への移転阻止の問題である。少なくとも現段階では、日本は韓国を直接的な安全保障上の脅威と位置づけているわけではない。しかし、韓国を経由した不正輸出が発生し、それが中国や北朝鮮の能力向上に寄与するような状況が生じた場合には、その意図にかかわらず、間接的に日本にとっての脅威は拡大するという言い方はできるだろう。また、歴史的には日本自体が同様に、輸出管理レジーム上の違反によって米国から強い懸念を示された経緯もあり、それが今日の輸出管理体制の強化につながっている。1987年に発生した東芝機械によるCOCOM違反事件は、その戦略的な負の波及効果の大きさゆえに、日本政府による輸出管理への意識を大きく高め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北朝鮮や中国への不正な技術移転を防ぐために日本が輸出管理体制を強化していることは明白であるが、それは日本単独で行われるものでは当然ない。伝統的に輸出管理の抜け穴となる国家の存在は、規制の実効性を削ぐ要因とみられるため、日本は他国による輸出管理体制の強化も含めて対策を進めてきた。このような輸出管理への政策的態度は、必ずしも現在の韓国に対してのみ向けられるものではない。冷戦終焉前後から今日に至るまで、日本の輸出管理政策は東南アジア地域を含む各国を巻き込むかたちで強化していくことを目指しており、デュアルユース技術めぐる国際的な問題意識の高まりを受けて、近年その取り組みは加速している。

こうした状況を踏まえたうえで、日本政府にとって、元徴用工の問題と輸出管理の問題は交渉の材料としてリンクしうるのか、ということ自体も問い直されるべきであろう。確かに時系列的には、韓国において元徴用工問題に対する判決の問題が発生し、次いで日本による対韓輸出管理の厳格化が発表されたという流れになっている。しかし、韓国政府はそこに「報復」というかたちの因果関係の存在を主張する一方、日本政府の公式な主張は、両者の関係を切り離すものである。日本政府がこのような立場を堅持する場合、仮に今後、韓国側が元徴用工問題をめぐる主張を軟化させたとしても、もはやそのこと自体を以って日本政府が韓国の輸出管理上の取り扱いを元に戻す直接的な理由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だろう。とすれば、議論の落としどころは韓国の輸出管理体制がいかなるかたちで具体的に改善されるかということに集約されてくる。

交渉カードとしてのGSOMIA

もう一点、今日の日韓における輸出管理の問題に関連づけて韓国政府が投げ

かけている、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の更新拒否というオプションは、取引材料としてどのような意味を持つのであろうか。ひとつは、安全保障上の影響である。日本にとっては、確かにGSOMIAは安全保障政策において重要な協力の枠組みであるという立場を取りうる。GSOMIAの締結については、2011年に日本の民主党政権下において韓国との公式協議が開始されているが、その前後にも北朝鮮によるミサイル発射実験や核実験が散発しており、また、2010年には韓国海軍の哨戒艇沈没事件が発生するなど、朝鮮半島情勢は日韓を含む東アジアの安全保障を脅かしている状況があった。2019年に入ってから北朝鮮によるミサイル発射実験も加速しており、当時と比べてとしても、東アジアの安全保障情勢が改善したと考えられる要素はあまりなさそうである。

こうした状況が日本だけでなく、韓国や米国にもあてはまることは、韓国によるGSOMIAの離脱というカードの有効性を弱めている。もし各国におけるこれまでの脅威認識が(日本をめぐる国内政治感情の悪化はともかくとして、現実主義的な観点から)大きく崩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だとすれば、韓国にとっても同様に、GSOMIAは当座の安全保障を確保するうえで必要な措置であり続けているはずである。また米国にとっても同様の状況がある。伝統的に東アジアの安定や中国の影響力拡大に対する布石という観点から安全保障上の日韓協力の強化を求めてきたが、特に同盟国への負担分担を推し進める近年の傾向からすれば、米国もまた、日韓どちらに譲歩を求めるかは別にしてもGSOMIAの破棄には反対するはずであるし、事実、現段階ではそのように報道されている。

もしこうした状況認識が正しいとすれば、韓国からGSOMIAの破棄に言及することは、日韓関係だけでなく、米韓関係もまた同時に悪化させる可能性をはらんでいる。韓国によるGSOMIAの破棄という交渉カードは、確かに日本や米国に対してコストを負担させるという点で行動変更の誘因を与えうるが、そこに同時に韓国自身が負うリスクが伴っている点で、カードとしての説得力は相対的に弱くなるだろう。また、東アジア全体の安全保障スキームの維持が依然として韓国にとって重要な政策目標である続けているのであれば(つまり、北朝鮮や中国への大幅な接近を企図するのでなければ)、輸出管理の問題に対処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伝統的な同盟関係にくさびを打つような取引は、対価としては大きすぎるような印象もある。そもそも、日韓交渉上も先に述べたのと同じ理由で、輸出管理の厳格化とGSOMIAの更新は必ずしも論理的にリンクしているわけ

ではなく、そこに「説明可能な取引」の余地があるかどうかは疑問も残る。

現実主義的な利益と政治的な現実

日韓の目の前には、北朝鮮への対処を含む東アジアの安全保障環境の安定、経済的相互依存の深化と産業の活性化、あるいは米国を含めた関係の良好化といった明白な「現状から得られる利益」がある。またそれは、経済交流の停滞や安全保障環境の悪化が、長期的にはかつて以上の損失を双方にもたらしうることも示唆する。それゆえに、しばしば日韓に向けて米国から投げかけられるように、国内政治事情を排した現実主義的な正解は協力、ということになるのだろう。しかしもちろん、国内政治を無視することが現実的ではないことも明らかであり、それは今にはじまったことでもない。

8月2日、日本政府は「ホワイト国」リストから韓国を除外することを閣議決定した（より具体的には「ホワイト国」の通称自体を廃止したうえで、グループAからグループBへの変更というかたちをとった）。これに対して同月12日には、韓国政府が日本を輸出管理の優遇対象国から排除するとの方針を発表した。このことは、日韓の間で「報復」の連鎖が始まったことを意味するのだろうか。それとも、日韓がようやく輸出管理制度の問題という同じ土俵にのぼり、解決に向けた具体的な議論が進められるようになることを意味するのだろうか。現段階では、今後の経済産業面での影響の程度や、24日に更新期限を控えたGSOMIAの取り扱いなどを含めて、まだ不確定要素が多く残っている。そうした中で今後の交渉がどのような経緯をたどるのかを理解するには、日韓双方における国内政治の展開に目配りしつつも、日韓の相互作用の中でそれぞれの利害がどのように変化し、いかなるかたちでそれが交渉に反映されていくのかをつぶさに検討し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

[2019年8月17日脱稿]

❖ 저자 약력

■ 齊藤孝祐

現 横浜国立大学研究推進機構特任准教授。筑波大学人文社会科学研究所国際政治経済学専攻修了。専門は国際政治学、安全保障論、科学技術と政治。主要著書に『軍備の政治学—制約のダイナミクスと米国の政策選択』（白桃書房、2017年）、「デュアルルースの政治論—科学研究と安全保障はいかに向き合うか」『安全保障の位相角』（共著、法律文化社、2018年）、『日本外交の論点』（共編著、法律文化社、2018年）など。

목 차

1. 문제제기
2. 아베 정권기 역사수정주의 정책화의 한계
3. 2015년, 일본 정부의 국제주의 역사 정책 정착
4. 가치관 외교 패러다임과 물신화된 '국제질서'
5. 나가며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와 2019년 한일 갈등

이정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1. 문제제기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 1일 ‘대한민국을 향한 수출관리 운영 재검토(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를 발표하고 3일 후인 7월 4일부터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3개 품목의 대한 수출을 포괄수출허가제도에서 빼서 개별 수출허가신청을 통한 수출심사 대상으로 변경시킴. 또한 동 발표문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검토를 예고하고, 그 결과로 일본 정부는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각의 통과시킴¹⁾
- 일본 정부에 의한 소위 ‘수출관리의 엄격화’는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부인하고 있지만, 한일 양국 사이 역사 인식 관련 현안인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임은 자명한 사안. 일본 정부에 의한 상정 외의 도발로 인해 2019년 7월과 8월 초의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시기 중 하나로 손꼽혀지게 되었음
- 일본 정부는 보복도 아니며 금수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본 국내 제도 변화임을 주장하고 있음. 또한 한국에 대한 무역관리 변동의 이유로 ‘신뢰 관계의 훼손’을 언급하고 있지만, 신뢰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 또한 수출관리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 한국에 사전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설명책임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일반 행정사무와 국가관계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보였음.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명확한 가운데 국제무역 규범상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포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자기기만적 성격이 다분함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다양한 반발의 목소리가 있지만, 한국의 ‘신뢰관계의 훼손’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존재함. 따라서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엄격화’에 대한 일본사회의 지지도는 높은 상황.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일본 기업들에게 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다양한 반발의
목소리가 있지만,
한국의
‘신뢰관계의 훼손’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존재*

아베의**역사수정주의적****역사 인식은****일본 국내와****역사 현안 이슈와****관련된 주변국가인****한국, 중국뿐만 아니라****미국에서도 우려하던****사항**

는 피해에 대한 우려,²⁾ 외교적 출구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³⁾ 등은 한국 측이 ‘신뢰 관계의 훼손’을 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책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징용재판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명확한 가운데, 소위 ‘신뢰 관계의 훼손’이 역사 문제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일본 내 불만이라는 점은 분명한 상황

-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의 기준과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의 패러다임이 일본의 오피니언 그룹 내에서 조약과 협정의 국가 간 약속에 대한 신의 배반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일본사회 내 지지가 큰 상황임. 역사적으로 언제나 존재해온 문명론적 한국 비하의 혐한론과 일본의 과거 역사적 과오에 대한 부정론에 입각해 있는 역사 수정주의와는 다른 차원의 반한 담론이 2019년 한일 갈등의 기저에 존재하고 있음
-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 속에서는, 일본의 대한 정책에 대한 정책 기초를 역사수정주의(역사왜곡)와 평화주의 세력의 양분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일본 정부의 역사 정책에서 역사수정주의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역사 현안 관련 대한정책의 중심 기초라 보기 어려움. 정치인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적 인식에서 기인하는 아베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한 일본 국내의 우려는 아베 정권이 2015년 아베 담화를 기점으로 국제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약화되었고, 아베 정권은 국제주의 노선을 통해서 일본 국내의 보수리버럴과 중도세력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음
-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로 전면화된 2019년 한일 갈등을 아베를 비롯한 정권 핵심관계자의 역사수정주의적 인식으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강경보수 세력을 넘어서 일본 내에 보다 광범위한 실용주의적 보수중도 세력에게 퍼져 있는 한국이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고 하는 논리의 근간이 되는 국제주의 외교 노선 속에서 이해하여야 함

2. 아베 정권기 역사수정주의 정책화의 한계⁴⁾

- 아베가 일본 정치권 내에서 역사수정주의를 대표해 온 인물인 것은 명확한 사실. 1990년대 보수리버럴과 혁신세력에 의해 주도되어온 역사 화해 노선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던 여러 의원 단체(역사·검토위원회, 종전50주년국회의원연맹, 역사교육의원연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

던 아베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침략’ 정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이슈에서 역사 화해 노선과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해왔던 인물임.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지에 대한 아베의 인식은 의회 속기록과 미디어 보도에서 쉽게 발견됨⁵⁾

-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은 일본 국내와 역사 현안 이슈와 관련된 주변국가인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려하던 사항임.⁶⁾ 제2기 아베 정권 출범 전에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에서 제1기 아베 정권기에 역사수정주의적 인식의 정책화 실패를 자아비판하는 아베의 발언들 속에서 이와 같은 우려는 확대되었음
- 하지만, 제1기 정권기(2006~7) 동안 역사수정주의의 정책화, 즉 역사 화해 노선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역사 정책의 변동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아베는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기 정권기에도 역사수정주의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데 한계를 보였음
- 제2기 아베 정권이 역사수정주의의 정책화를 당초부터 포기하였던 것은 아님. 2013년에 역사수정주의 정책화의 여러 증후가 있었음.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23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학문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발언을 함. 또한, 고노 담화가 나오기까지의 경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고노 담화 집행 과정이 실증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외교적 타협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킴.⁷⁾ 결정적으로 2013년 12월 26일 기습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함
- 하지만 2013년 이후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노 담화 검증에도 불구하고 고노 담화 자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는 중. 제2기 아베 정권의 초기 시기인 2013년과 2014년에는 야스쿠니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부 정책에 역사수정주의적 성격을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노력이 부분적으로 발견되지만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에 부합하는 노선으로 역사 정책의 대폭적 변경은 이루지 못함
- 2013년 12월 26일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역설적이게도 아베 정권 역사 정책에서 역사수정주의가 제약되는 계기가 됨.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일본 국내의 논란과 한국·중국의 비판은 예상되었던 것에 비해서 미국 정부의 우려는 예상외로 간주됨. 야스쿠니 신사

*2013년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태도는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서
미국 변수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

21세기구상간담회의**토론 논의를****주도하고 있는****기타오카 등의****국제주의 관점은****역사수정주의****역사 인식과****공존하기 어려움**

참배는 기존까지 한일 관계, 중일 관계의 외교 이슈로 전개되어 왔으나, 2013년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태도는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서 미국 변수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됨

-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 이후 제2기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은 전후 70주년인 2015년에 아베 정권에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는가에 집중됨. 아베는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에 반대하는 역사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후 60주년이었던 2005년에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담아낸 고이즈미 담화와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담화를 만들어 내고 싶어 함. 무라야마 담화와는 다른 ‘미래 지향적’ 내용을 담아내고 싶다고 발언해 온 아베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전후 70주년 담화를 표명할 것인가에 대해 일본 국내외의 관심이 증폭됨. 전후 70주년 담화는 제2기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간주되었음

3. 2015년, 일본 정부의 국제주의 역사 정책 정착

- 아베 정권은 종전 70주년인 2015년 8월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와 차별화되는 아베 담화를 내놓기 위한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구성함. ‘20세기를 되돌아보고 21세기의 세계 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는 지식인 간담회(20世紀を振り返り21世紀の世界秩序と日本の役割を構想するための有識者懇談会, 이하 21세기구상간담회)’는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6회 개최되었고, 8월 7일 최종보고서를 내놓음⁸⁾
-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위원들 사이에 동의된 내용들이 전후 70주년 담화에 담기고, 이것이 제2기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중심적 요체가 된다는 점에서 21세기구상간담회의 의의가 있음. 하지만, 21세기구상간담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이미 논의 결과의 내용은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음. 16명의 위원 중 역사수정주의자는 교토대학 명예교수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 한 명뿐임. 후에 나카니시는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자신의 의견이 고립되어 있었다고 회고함⁹⁾
-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이 간담회 내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일본 근·현대사에 대해 나카니시와 의견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보강되었어야 하고, 아베는 그러한 인사들과의 인연이 깊음. 하지만,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는 아베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 보유자들

을 찾아보기 어려움

- 간담회 내용 구성과 발표문의 중심을 이루는 특징은 일본적 맥락이 아니라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일본의 행위와 위상을 논하고 있다는 점임. 21세기구상간담회 논의를 주도한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3차 모임에서 초빙발표자로 나선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4차 모임의 초빙발표자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는 일본 근현대사를 국제질서에 대한 일본의 협조와 이탈을 기준으로 일본사를 평가하고자 함
- 21세기구상간담회의 토론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기타오카 등의 국제주의의 관점은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과 공존하기 어려움. 우선 역사수정주의는 역사 인식에서 일본 중심주의이고, 일본이라는 문화 공동체의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일본 역사를 해석하는 복고주의임. 국제주의의 관점은 역사수정주의가 비판해온 진보 사관과는 거리가 있지만, 일본사를 일본 밖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역사수정주의의 세계관과 충돌함
- 나아가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발견되는 전전과 전후 시기 국제질서의 성격에 대한 평가도 역사수정주의 세계관과 충돌함. 국제주의 관점에서는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 발전에 대한 미국의 공헌을 높게 보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조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함. 하지만 역사수정주의 세계관에서 미국은 전후 일본이 자신의 문명론적 가치관을 반영한 국가 체제와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임. 전후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의 개정 문제에 대해 국제주의 관점과 역사수정주의 모두 개헌론으로 연결되지만,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개헌은 자주성과 전통성, 즉 미국에 의해 훼손된 일본적 가치와 국가적 명예의 복구라는 의미를 갖는 반면에, 국제주의 관점에서 서 있는 기타오카에게 개헌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공헌하면서 일본의 변명이 기대고 있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
- 21세기구상간담회는 국제주의 관점에서 일본의 근·현대사를 보고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최종 보고서에 고스란히 반영됨. 더 정확하게는 국제주의 관점을 담아내기 위한 간담회 위원 구성이었다고 볼 수 있음.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주류적인 국제주의 관점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해 성찰적 시각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적 소지가 다분함. 이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현 상황에 대한 정당화이며, 그렇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21세기구상간담회 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역사 화해 노선이 반성의 대상을 아시아로 삼고 있다는 점과 큰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현 상황에
대한 정당화이며,
그렇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21세기구상간담회
논의의 핵심**

**가치관 외교는
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에 대한
균형적 정책 노선을
정당화하는 수단**

차이를 보임. ‘세계 속의 일본’을 고려해야 한다는 21세기구상간담회의 국제주의 관점에서 ‘세계’는 ‘미국’으로 대치되어도 전혀 무리가 없음

- 21세기구상간담회의 결과 보고서에 기반을 둔 총리 담화는 2015년 8월 14일에 발표됨. 아베 담화의 핵심 키워드는 국제질서임. 해당 시대의 국제질서에 부합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일본의 근·현대사에서 각 시기 별 해석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국제주의적 역사 인식은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기타오카나 호소야가 보여준 인식이기도 함
- 이러한 국제주의적 역사 인식은 아베 담화 발표 이전에 2015년 4월 22일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동 회의) 60주년 기념 정상 회담에서의 아베 총리 연설¹⁰⁾과 동월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의 아베 총리 연설¹¹⁾에서도 국제질서에 대한 강조는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음. 이는 21세기구상간담회의 논의 과정 또는 이전에 제2기 아베 정권 내에서 국제주의적 관점이 정부 역사 정책의 공식적인 외형으로 선택되었으며, 이에 입각하여 21세기구상간담회의 구성원이 선택되었다는 점을 암시해 줌

4. 가치관 외교 패러다임과 물신화된 ‘국제질서’

- 아베 담화의 마지막 부분은 아베 정권 외교 정책 지향의 핵심을 보여 주고 있음. ‘우리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어 버린 과거를 우리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일본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기본적 가치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며, 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손잡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가치를 높이 내걸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지금껏 이상으로 공헌해 나가겠습니다. 종전 80년, 90년, 나아가서는 100년을 향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일본을 만들어 나갈 그런 결의입니다.’¹²⁾
- 이 부분은 가치관 외교 정책 노선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가치관 외교 정책 노선은 제1기 아베 정권의 ‘자유와 번영의 호,’ 제2기 아베 정권의 ‘민주적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의 바탕이 되어 왔음.¹³⁾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외교를 우선시한다는 점은 이러한 가치를 국가 정치 체제의 원칙에 포함하고 있지 못한 중국, 북한에 대한 배제의 논리가 됨. 가치관 외교는 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에 대한 균형적 정책 노선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아베 담화에 언급된 적극적 평화주의는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일본의 군사 안보적

제약 해소를 의미하는 안보 체제의 변화를 의미함. 가치관 외교와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일체화되어 있음. 미국과의 협력을 실용주의나 힘의 논리가 아닌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자리 잡도록 위상지우는 것이 가치관 외교 패러다임의 역할임

-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기타오카, 다나카, 호소야 3인이 세계사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보여주었던 국제질서에 대한 협조를 기준으로 일본의 국가적 행위를 판단한다는 관점은 현재 일본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논리로 연결됨. 기타오카, 다나카, 호소야 3인 모두 안보법제간담회의 위원이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님
- 아베 담화의 국제주의도 가치관 외교 세계관의 반영물임. 보편적 국제질서는 존재하고, 이에 협력하는 일본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역사 해석임. 가치관 외교 세계관에 입각한 국제주의 담론에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은 동의하지 못함. 가치관 외교 세계관에서 일본의 미국중심적 국제주의 외교 담론을 구축하려는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나 가네하라 노부가쓰(兼原信克)의 세계관은 역사수정주의자에게 ‘역사 친미’일 뿐임
-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아베에게 기대한 것은 일본적 가치의 계승과 가치 부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한 복고주의적 교육·문화 정책 추구하고, 더불어 일본 근·현대 역사에 대한 대내외의 비판적 관점과 싸우며 ‘아름다운 나라’ 일본의 자랑스런 역사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역사 정책의 추구였음. 역사수정주의자 입장에서 가치관 외교에 입각한 아베 담화의 국제주의적 성격은 미국 중심의 세계사 서술 속에 일본을 객체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에 다름 아님
-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아베 담화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¹⁴⁾하는 이유는 아베 담화가 일본 국가 정체성 인식 차원에서 그들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세계관에 입각해 있기 때문임.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소위 ‘보편적 국제질서’는 ‘미국적 가치’일 뿐임. 또한 그들은 ‘미국적 가치’와 ‘일본적 가치’가 맞물려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 아베 담화의 국제주의적 성격과 그에 대한 일본 내 역사수정주의자들의 반발은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수정주의를 중심에 놓는 고정적 사고방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소위 ‘보편적
국제질서’는
‘미국적 가치’ 일 뿐**

**역사수정주의와
협한론 차원이 아니라,
국제주의 외교 노선에
입각한 외교구상
속에서 한국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

- 21세기구상간담회와 아베 담화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였던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 아베 담화의 명백한 청자는 일본에 대한 승자였던 미국임. 아시아의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 중심에 없다는 점에서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과 아베 담화의 전제가 되는 국제주의의 관점은 차이가 없음. 하지만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역사 정책과 국제주의에 입각한 역사 정책은 미국에게 상이하게 이해됨. 정책적 차원에서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적 역사 정책은 2013년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을 보는 미국의 불신과 불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었음
- 아베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니시베 스스무(西部邁)는 유고에서 아베에게 기회주의를 버리라고 주문한 바 있음.¹⁵⁾ 니시베는 아베에게 신념에 입각한 역사 정책의 추구를 주문하고 있으며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의 신념에 대해 믿고 있음. 하지만 2015년 이후 역사 정책에서 보여준 아베의 정책 선택에서 신념 요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전략적 고려 속에서 국제주의적 관점의 역사 정책이 일본의 국가 이익과 아베 정권의 정권 이익에 부합하는 한 아베 정권은 국제주의적 관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5. 나가며

-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일본 국내에서 역사수정주의에서 차별화된 국제주의 외교의 일환으로 간주됨.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아베 담화와 더불어 위안부 합의를 아베에 대한 지지 철회의 이유로 제기함. 한국의 정권교체 후 위안부 합의 이행에 굴곡이 생긴 뒤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이를 국제주의 외교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함
- 반면에 일본 보수 그룹 내 실용주의적 중도 그룹에게 국제주의에 입각한 아베 담화와 위안부 합의는 아베 정권 외교노선의 안정적인 신뢰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음. 일본 보수 정치권 내 중도 그룹에게 아베 총리가 본인의 신념을 꺾고 합리적 방향으로 향했는데 한국이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에서 이에 대해 호응하지 않아 난관에 빠진 것으로 이해함. 이러한 맥락에서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입장에 대한 일본 내 광범위한 반감이 해석될 수 있음. 역사수정주의와 협한론 차원이 아니라, 국제주의 외교 노선에 입각한 외교구상 속에서 한국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 일본 내 국제주의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중도 현실주의 세력은 역

사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점에서 한일 간 역사현안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 하지만 일정한 외교적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에 있어서 열려 있을 가능성이 다분함. 더구나, 국제주의 담론에 입각한 일본 내 보수중도 현실주의 세력은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가 야기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일본의 보수중도 현실주의 세력을 일본 내 여론 변화의 동력으로 사용해서 2019년 한일갈등에 대응할 것인지는 한국 정부에 달려 있는 성격이 있음.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 내 보수중도 현실주의 세력이 기대고 있는 국제주의의 초점은 1965년 청구권협정을 지키라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외교협약에 응하라는 요구임. 국내 사법체계의 최고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한국 정부에게 사법부의 판단을 외교적으로 재론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 하지만 일본 국제주의 노선이 말하고 있는 국제질서가 고정불변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지 않고, 자국이익을 위한 현실주의적 전략사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임에 입각할 때, 국제주의 노선의 일본 보수중도는 한일 양국 사이의 외교적 타협에 대해서 전향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2019년 7월 이후 한국 정부가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지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외교적 타협에서 한국이 그리고 있는 구체적 상에 대해서 일본 정책그룹 내에 잘 전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국제질서 위반에 입각해 논박해야 함.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의 국제질서 위반의 성격에 대해서 현재 일본 내에서는 국내 제도 변화일 뿐 국제질서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매우 일반적임. 국제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에 맞추다 보니 ‘수출관리 엄격화’가 실제로는 수출입 관련 양국 기업에게 있어서의 거래비용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가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역사 문제와 별개라면, 신뢰와 신의에 입각한 설명책임의 규범에 입각했을 때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해서 환기시켜야 함
- 역사현안에 있어서 국제규범 준수를 강하게 천명해온 일본 측에게 일본 정부의 소위 ‘수출관리 엄격화’가 가지는 자기모순적 성격은 국제규범의 상징을 한국 측이 가져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역사현안에 있어서 일본 중도보수의 실용적 외교 타협 지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커지게 하고 있음. 물론 역사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에서 외교적

협상이 실제로 테이블에 있는지, 그리고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는 국내적 합의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가 일본 내 중도보수를 외교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지에 있어서 기본 전제가 될 것임

주석

- 1) <https://www.meti.go.jp/press/2019/07/20190701006/20190701006.html>(검색일: 2019/8/16); <https://www.meti.go.jp/press/2019/08/20190802001/20190802001.html>(검색일: 2019/8/16).
- 2) 藤井彰夫, “報復の連鎖に「勝者」はいない,” 『日本経済新聞』(2019/7/2); 高橋玲央, “輸出規制強化で「韓国半導体」は大打撃なのか,” 『東洋経済オンライン』(2019/7/6).
- 3) 中西寛, “文政権、止まらぬ急進主義 対韓外交、戦略はあるか,” 『毎日新聞』(2019/8/11); 山田孝男, “韓国へ届く言葉を,” 『毎日新聞』(2019/8/12).
- 4) 2-4의 내용은 필자의 논문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변용: 아베 담화와 국제주의,” 『아시아리뷰』 9권 1호(2019.8.31)에 기반을 두고 있음.
- 5) 구유진,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 보수의원연맹 연구,”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일본 파워엘리트의 대한정책』(선인, 2016); 임은정, “아베 유신과 한반도: 제2기 아베 정권의 대전략과 대(對)한반도 정책,”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일본 파워 엘리트의 대한 정책』(선인, 2016).
- 6) Bert Edström, *The Success of a Successor: Abe Shinzo and Japan's Foreign Policy*.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2007); Mike M., Mochizuki, Samuel Parkinson Porter, “Japan under Abe: toward moderation or nationalism?” *The Washington Quarterly* 36(4), 25-41(2013); 渡辺治, “安倍政権とは何か?” 渡辺治・岡田知弘・後藤道夫・二宮厚美, 『<大国>への執念 安倍政権と日本の危機』(大月書店, 2014).
- 7) 남상구, “고노 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49, 460-462(2014).
- 8) 21世紀構想懇談会, 『戦後70年談話の論点』(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5).
- 9) 中西輝政, “戦後70年と日本の進路”(2015), <https://www.kokuminkaikan.jp/chair/detail/20150830.html>(검색일: 2019/8/16).
- 10)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422speech.html(검색일: 2019/8/17).
- 11)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429enzetsu.html(검색일: 2019/8/17).
- 12)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150814.html(검색일: 2019/8/17).
- 13) Yuichi Hosoya, “The Rise and Fall of Japan's Grand Strategy: The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and the Future Asian Order,” *Asia-Pacific Review* 18(1) (2011); Yuichi Hosoya, “Japan's Two Strategies for East Asia: The Evolution of Japan's Diplomatic Strategy,” *Asia-Pacific Review* 20(2)(2013).

- 14) 아베의 역사 정책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지식인의 대표적 비판으로는 西尾幹二, 『保守の真贋: 保守の立場から安倍政権を批判する』(徳間書店, 2017); 西尾幹二・中西輝政・柏原竜一, 『日本の「世界史的立場」を取り戻す』(祥伝社, 2017); 中西輝政・西岡力, 『なぜニッポンは歴史戦に負け続けるのか』(日本実業出版社, 2016).
- 15) 西部邁, 『保守の遺言: JAP.COM衰滅の状況』(平凡社, 2018).

참고문헌

- 구유진. 2016.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 보수의원연맹 연구.”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일본 파워엘리트의 대한정책』. 선인.
- 남상구. 2014. “고노 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49.
- 임은정. 2016. “아베 유신과 한반도: 제2기 아베 정권의 대전략과 대(對)한반도 정책.”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일본 파워 엘리트의 대한 정책』. 선인.
- Edström, Bert. 2007. *The Success of a Successor: Abe Shinzo and Japan's Foreign Policy*.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 Hosoya, Yuichi. 2011. “The Rise and Fall of Japan's Grand Strategy: The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and the Future Asian Order.” *Asia-Pacific Review* 18(1).
- _____. 2013. “Japan's Two Strategies for East Asia: The Evolution of Japan's Diplomatic Strategy.” *Asia-Pacific Review* 20(2).
- Mochizuki, Mike M., Samuel Parkinson Porter. 2013. “Japan under Abe: toward moderation or nationalism?” *The Washington Quarterly* 36(4).
- 高橋玲央. “輸出規制強化で「韓国半導体」は大打撃なのか.” 『東洋経済オンライン』(2019/7/6).
- 渡辺治. 2014. “安倍政権とは何か?” 渡辺治・岡田知弘・後藤道夫・二宮厚美. 『<大国>への執念 安倍政権と日本の危機』. 大月書店.
- 藤井彰夫. “報復の連鎖に「勝者」はいない.” 『日本経済新聞』(2019/7/2).
- 21世紀構想懇談会. 2015. 『戦後70年談話の論点』. 日本経済新聞出版社.
- 西尾幹二. 2017. 『保守の真贋: 保守の立場から安倍政権を批判する』. 徳間書店.
- 西尾幹二・中西輝政・柏原竜一. 2017. 『日本の「世界史的立場」を取り戻す』. 祥伝社.
- 西部邁. 2018. 『保守の遺言: JAP.COM衰滅の状況』. 平凡社.
- 中西寛. “文政権、止まらぬ急進主義 対韓外交、戦略はあるか.” 『毎日新聞』(2019/8/11); 山田孝男. “韓国へ届く言葉を.” 『毎日新聞』(2019/8/12).
- 中西輝政・西岡力. 2016. 『なぜニッポンは歴史戦に負け続けるのか』. 日本実業出版社.

❖ 저자 약력

■ 이정환

現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역임. 최근 논문으로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의 현실주의적 안보론과 일본적 민주주의론(2019)”,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와 2012년 센카쿠 분쟁화의 일본 국내정치과정(2018)” 등이 있음.

목 차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일갈등의 구조, 전망

손 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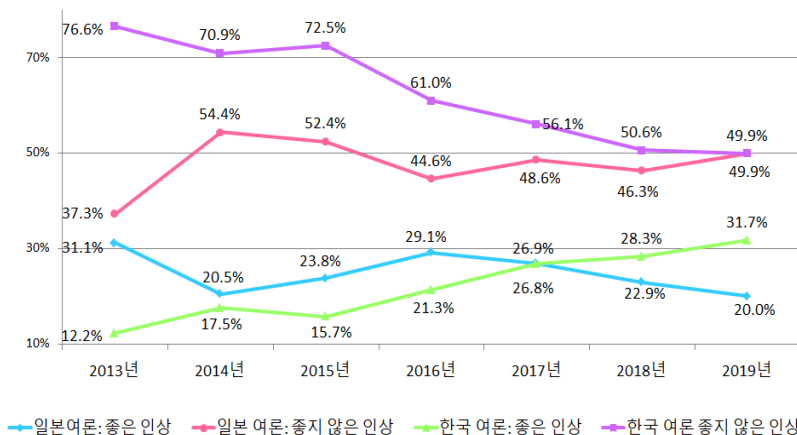
1. 문제 제기

가. 이 글의 배경

- 지난 7월 1일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래 악화일로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는 2018년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나 위안부 관련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제주 관함식 옥일기 논란, 동해상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 공방 등 여러 사건의 연장선일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천황 사죄 요구 발언, 2013년 아베 총리의 침략 부인 발언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2014~15년 고노 담화 재검토, 위안부 해법 갈등과 국제 공공외교전, 2016년 위안부 합의 논란과 부산소녀상 설치, 2017년 위안부 합의 재검토 등 “7년 갈등”의 선상에 있음

- 1. 문제 제기
 - 가. 이 글의 배경
 - 나. 이 글의 목적
- 2.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혼란: 민족주의 vs. 민족주의
 - 가. 반(反)세계화와 민족주의의 부활
 - 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무역규범/규칙의 혼란
- 3. 아베외교의 구조적 속성
 - 가. 복고 민족주의 부상
 - 나. 탈한(脫韓)론: 한국의 전략적 위상 하향 조정
- 4. 한일관계의 향후 전망
 - 가. 한일갈등의 하방 경직성
 - 나. 정책 전망

〈그림 1〉 상대국에 대한 인상(2013~2019)



- 지난 7년간 EAI-젠론NPO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저하는 이러한 장기 갈등 추세를 반영하는

양국 간**신뢰의 위기는****거시적으로****자유주의 국제질서의****혼란이란****대외적 배경 하에서****양국의 민족주의****충돌 즉,****일본의****복고 민족주의와****한국의****저항 민족주의의****충돌로 야기**

것이라 할 수 있음(<그림 1>).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즉, 한국에 대한 인상을 ‘좋다’, ‘대체로 좋다’로 응답한 일본인은 2013년 31.1%에서 20.0%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부정적 인식은 2013년 37.3%에서 2019년 49.9%로 상승하고 있음(손열 외 2019)

나. 이 글의 목적

- 2010년대 한일 양국 간 물리적 이익의 변화 즉, 경제 및 안보이익의 결정적 괴리가 나타나지 않은 속에서 양자 갈등이 진전된 데에는 양국 정부 간 신뢰의 위기, 특히 감정적 대립이 자리하고 있음
- 이 글은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조장하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이를 반영하는 국내 이념적 지형의 변화에 주목하여, 위기의 구조적 성격, 그리고 본격적 관계 개선의 어려움을 지적하고자 함
- 양국 간 신뢰의 위기는 거시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혼란이란 대외적 배경 하에서 양국의 민족주의 충돌 즉, 일본의 복고 민족주의와 한국의 저항 민족주의의 충돌로 야기되는 것임

2.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혼란: 민족주의 vs. 민족주의

- 2010년대 들면서 협력적 안보, 개방적 경제질서, 개인의 자유 신장 등 미국주도 국제질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으로 혼란 상황에 빠짐

가. 반(反)세계화와 민족주의의 부활

- 1980년대 이래 본격화된 지구화(globalization)의 물결은 상품, 자본, 인적 이동의 자유화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국가 간 불균형 성장, 그리고 국내적·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적 반발을 야기,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보호주의의 확산을 이끌게 되었음
- 특히 2007~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산업국에서는 세계화 진전에 따라 자국이 쇠퇴하고, 불균등 발전의 희생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도덕적 쇠퇴로 연결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문화적으로 (합법, 불법) 이민, 인종적 소수가 기존의 사회적 유대를 해치고 있다는 인식, 이에 대한 반감이 확산됨. 대외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전통적 산업부문, 전통적 산업지역(미국의 경우 러스트벨트)을 보호하려

는 강렬한 경제민족주의, 이질적 문화요소로부터 전통적 공동체를 보호하는 자민족우선주의(i.e., 백인우월주의)가 정치적 세를 얻게 됨

- 그 극단적 정치형태로서 포퓰리즘이 등장함. 사회적·정치적 양극화에 따라 정치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속에서, 기성 정치를 혐오하고 잊혀진 대중의 목소리를 부활하는 반-제도권(establishment) 정치가 부상함 (Judis 2016; Eichengreen 2018)
- 민족주의의 부활은 포퓰리즘의 횡행과 궤를 같이 하여 자국의 상대적 쇠퇴 추세를 역전시키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복고 민족주의의 색채를 띤. 현재의 쇠퇴 흐름을 바꾸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경향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은 1950년대 미국의 영광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며, 러시아 푸틴 역시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복고적 민족주의라 할 수 있음. 시진핑 주석에 의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혹은 “중국몽” 역시 영광스런 과거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사례이며, 일본 아베 총재가 일본의 재흥(再興), 즉, “Japan is back!”을 외친 것도 이런 차원임

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무역규범/규칙의 혼란

- 2010년대 들면서 세계경제질서는 미중 전략경쟁에 따라 규범/규칙의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특별히, 국제경제질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에 따른 “부정적 안보/경제 넥서스(negative security-economic nexus)” 혹은 “무역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trade)”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빈번히 나타남
- 민족주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강대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은 국가안보전략(2017)에서 “미국의 번영은 국가안보의 문제”라 선언하며 무역정책을 안보적 고려와 경제적 후생 고려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을 저지 혹은 지연을 위한 대중 무역압력, 국가안보를 위한 수입 제한조치(Section 232) 등으로 표출하고 있음
- 이는 기술혁신을 둘러싼 미중 마찰로도 이어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도전국(혹은 rising power)이 첨단 기술이전이나 취득 과정에서 패권국(혹은 established power)에 의해 제도화된 규범과 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질서 침해라는 외부효과(order externality)가 발생함. 이 경우 패권국은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해 강압적 규제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자유로운

패권국은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해

강압적 규제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자유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훼손

아베의**정체성의 정치****복고 민족주의에 의한****역사 재해석으로****이루어지므로****필연적으로****한국의****국가정체성과 충돌**

국제경제질서를 훼손하게 됨. 현재 미국과 중국은 5G, 인공지능, 반도체 부문에서 기술 및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줄이면서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 중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다양한 규제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기술 경쟁력을 제한하기 위해 보호주의 무역수단을 빈번히 이용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2010년 센카쿠/다오위다오 영토 분쟁에 대한 보복조치로 대일 희토류 수출 제한, 사드 도입에 대한 보복조치로 대한 경제제재 조치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행태를 보여왔음
- 질서 교란의 주역은 미국과 중국임. 양국의 사례를 보면 문제는 강대국의 보호주의 자체보다는 영향력/권력의 남용, 무역수단의 기회주의적 활용에 있음. 미국의 TPP 탈퇴와 WTO 분쟁조정기구 무력화, ‘국가안보’ 남용 사례, 중국의 사드보복에서 보듯이 자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주변국들에 일방주의적 행동을 주저하지 않음. 과연 강대국의 기존 약속/협정이 지켜질 것인지, 규칙과 규범이 지속적으로 도전받지 않을는지, 이런 과제가 부상하고 있음
- 그림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은 명분적으로는 개방과 자유화, 공정무역을 위한 국제규범/규칙기반 질서를 지지하고 있음. 미국은 역내 국가들과 연대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의 약탈적, 수정주의적 행동을 억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규칙기반 국제질서 추구를 공인하고 있음. 중국 역시 최근 개방성, 투명성 등 국제규범에 기초한 일대일로 추진을 약속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통해 보편가치를 담는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만들고자 함

3. 아베외교의 구조적 속성

가. 복고 민족주의 부상

- 선진 산업국으로서 일본은 영광된 과거를 호출하여 자국의 부활을 주창하는 민족주의를 목도하고 있음. 이는 세계화에 따른 상대적 쇠퇴에 대한 불만, 세계화 자체에 대한 불만, 그리고 기존의 우익사조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음. 아베 총리는 과거 일본의 자신감 상실은 잘못된 교육에 있는 바, 일본의 근대사가 1945년 패전에 따른 승자의 정의

(victor's justice)에 기반하여 왜곡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왕의 교육을 청산하고 영광된 과거를 복원하는 애국주의 교육과 정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음

- 아베의 정체성의 정치는 복고 민족주의에 의한 역사 재해석으로 이루어지므로 필연적으로 한국의 국가정체성과 충돌함. 왜냐하면 일제의 미화는 한국의 국가정체성의 중요 요소로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임. 이는 한국에게 일종의 존재론적 불안과 위협(ontological insecurity/threat)으로 작용함
- 한국 민족주의는 구한말 저항운동, 올해로 100년 된 3.1운동 등 외세에 의해 존립이 부인되는 상황에서 자란 저항 민족주의적 속성을 띠고 있음. 문제는 외세의 핍박에 대해 거족적으로 대항하는, 피동적으로 저항하는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힘을 기르고 발전을 꾀하는 전진적·건설적 민족주의로 나아가야 하나, 2010년대 한국의 대일정책은 일본의 복고적 정체성 정치와 조우하면서 저항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온 것이 사실임

나. 탈한(脫韓)론: 한국의 전략적 위상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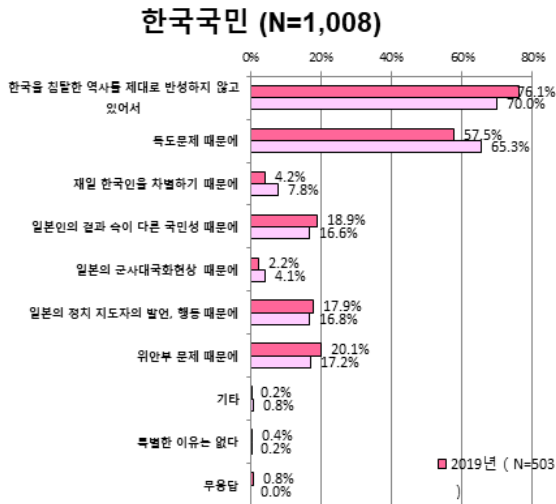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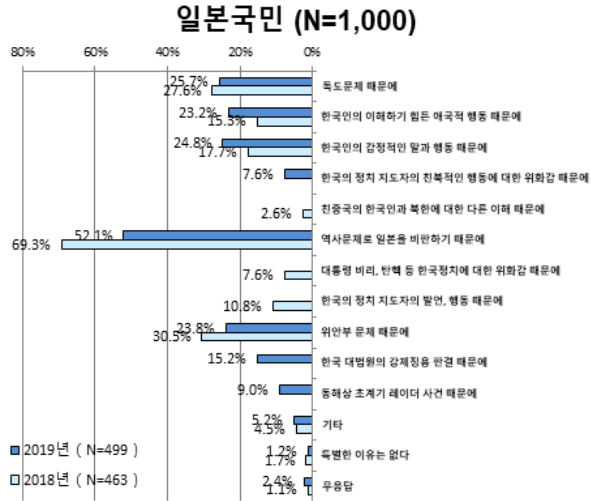
-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당시 조선과 청국과의 연대를 포기하고 아시아를 떠나 홀로 근대화와 서양화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 즉, “我國[일본]은 隣國의 開明을 待하여 共히 亞細亞를 興하기를 猶豫할 수 없다”며 “亞細亞東方의 惡友”를 아세아동방의 악우(惡友)를 떠나겠다는 탈아론(脫亞論)을 선언한 바 있음(“脫亞論,” 『福澤諭吉選集 7卷』). 현재 일본은 전략적으로 한국을 떠나는, 한국과 거리두기 속에서 자국의 외교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 그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 법치가 지켜지지 않는 국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로 규정함.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부산 소녀상 건립 시도 등이 이어지자 아베 정부는 공세로 전환하여 위와 같은 프레임으로 한국을 공략하고 있음
- 일본의 여론 역시 아베의 공세를 지지함. <그림 2>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일본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지만, 일본의 경우 역사인식 자체보다는 역사 이슈에 대한 한국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

*일본의 경우
역사인식 자체보다는
역사이슈에 대한
한국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하향조정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역사 문제 등으로 일본을 계속 비판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52.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한국인의 감정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24.8%)’, ‘한국인의 이해하기 힘든 애국적 행동 때문에 (23.2%)’ 등을 꼽는 것은 결국 한국인의 행동과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는 뜻임

〈그림 2〉 상대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



- 이러한 여론 추세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하향조정하고 있음. 2015년 ‘자유,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기본적 가치 공유하는 국가’란 표현을 삭제하고, 안보협력 순위를 강등하며, 2018년 우호국 범주에 한국을 배제함. 지난 1월 28일 고노 타로 일본 외상은 국회 2019

년 외교정책 연설에서 일본 외교의 목표로 첫째,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역지력을 향상하며, 둘째, 우호국 네트워크의 강화 즉, 인도, 호주, EU 등 기본적 가치(자유, 민주주의, 법치, 기본적 인권, 국제법 존중 등) 및 전략적 이익의 공유 국가와 연대 강화, 셋째, 근린제국(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과의 관계 강화, 넷째,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FOIP) 전략 및 포괄·진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추진을 꼽음. 아베 내각이 출범한 2013년 1월 연설과 비교하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두 번째 범주(우호국)에서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 수준의 세 번째 범주로 하향 조정된 것임

- 일본 정부는 Korea passing과 함께 자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군사력 강화(자강)+미일동맹+QUAD+CPTPP+인도태평양(FOIP)으로 설정하여 한국을 제외해 놓았음. 이런 점에서, 7.1 수출규제는 한일 양국 간 민족주의 갈등 속에서 국제질서의 약화를 틈탄 아베 정부의 Korea bashing이라 할 수 있음

4. 한일관계의 향후 전망

가. 한일갈등의 하방경직성

- 한일관계는 상호불신과 보복의 악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이 충돌이 자유낙하(free fall)로 가지는 않을 것임. 양국은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양자관계 악화에는 안보 면에서 미국 요인과 경제 면에서 상호의존에 따른 시장 요인이 작동하여 하방경직성이 있기 때문임
- 실제로 과거 위안부 갈등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미국의 경고에 의해 2014년 봄 투트랙 접근이 개시되었고, 시장의 경고(무역, 투자, 관광 하락), 중국 요인(중일관계 개선)으로 합의의 길에 이른 바 있음. 현재의 경우도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 요인과 시장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현재와 미래 국제구조의 변화 즉,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는 한편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혼란을 가져와 일본으로 하여금 ‘무역의 무기화’ 결행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한미일 결속을 추동하는 동력으로도 작용함. 미국은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6월 1일)에서 드러나듯이 중국견제를 위한 경제, 군사, 외교(파트

**미국의 개입이
악화 추세를 막는
역할을 하지만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복과
개선의 동력으로는
작용하기 어렵다**

한국 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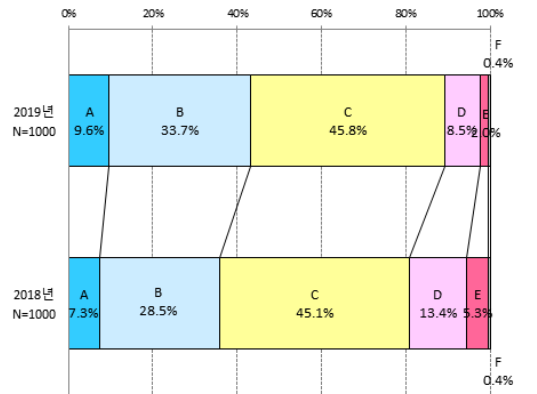
일본 측에 비해

한일관계 회복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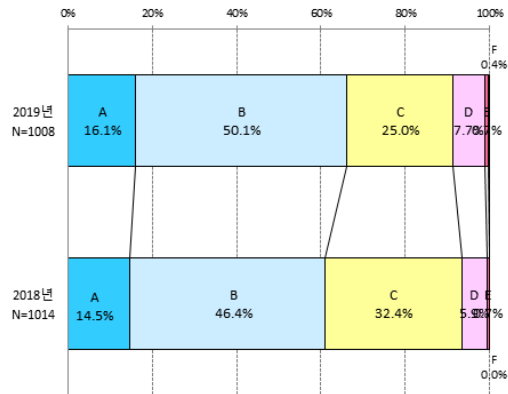
여론이 크다

너십) 3분면에서 미일 결속과 한미일 협력 강화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일정한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임. 문제는 지난 위안부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개입이 악화 추세를 막는 역할을 하지만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복과 개선의 동력으로는 작용하기 어렵다는 점임

〈그림 3〉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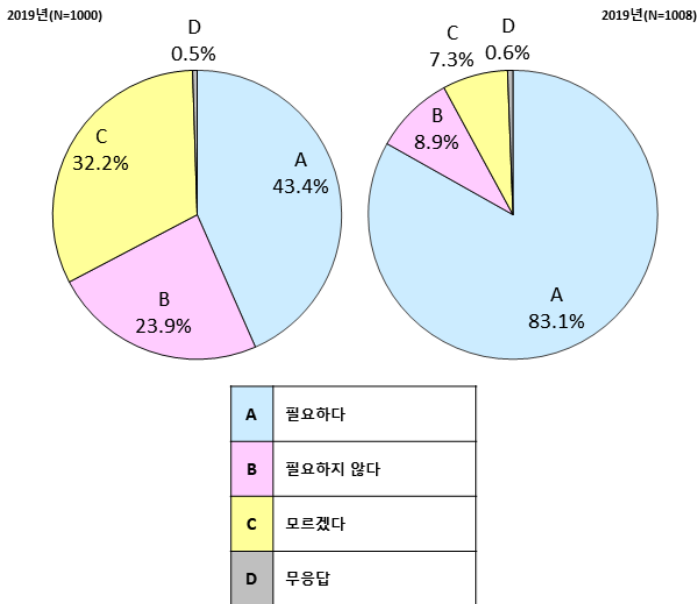
	A	B	C	D	E	F
	매우 그렇다	일정부분 그렇다	어느 쪽도 아니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무응답
19년	9.6%	33.7%	45.8%	8.5%	2.0%	0.4%
18년	7.3%	28.5%	45.1%	13.4%	5.3%	0.4%



	A	B	C	D	E	F
	매우 그렇다	일정부분 그렇다	어느 쪽도 아니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무응답
19년	16.1%	50.1%	25.0%	7.7%	0.7%	0.4%
18년	14.5%	46.4%	32.4%	5.9%	0.7%	0.0%

- 한 가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유인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임. 앞서 언급한 2019년 6월 발표한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 협력을 찬성하는 한국인은 66.2%이며 일본은 43.3%임(<그림 3>). 또한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한국인 응답자는 83.1%인 반면, 일본의 경우 ‘필요하다’가 43.4%임(<그림 4>). 요컨대 한국 측이 일본 측에 비해 한일관계 회복에 대한 여론이 크다고 볼 수 있음(손열 2019)

<그림 4>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나. 정책 전망

- 한국과 같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진 중견국은 자유주의,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생존과 번영에 사활적 조건임. 특히 미중 양강의 전략경쟁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른바 강대국 정치의 비극을 피하려면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대단히 중요함. 국제 규칙이나 규범 역시 강대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현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칙과 규범이 확립되어 있을 때 중견국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
- 일본이 정치적 목표를 위한 무역수단 사용 유혹 속에서도 한국에 강하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강대국에 의한 무역의 무기화 우려 때문임. 즉, 세계 경제 3위국 일본도 정경분리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따라

이른바 강대국 정치의 비극을 피하려면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대단히 중요

한일 갈등이**민족주의나****자주 문제 등****거대전략 담론으로****쉽게 비화되지 않도록****통제(contain)하는****동시에 역으로****이를 방지하기 위해****구체적 수준에서의****지역협력 (혹은****양자 협력)****의제들을 풀어가야**

서 중·미와 달리 명분론에서 자유롭지 못함.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강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수출규제가 보복이 아니라는 어설픈 주장을 반복하는 까닭은 한국에 대한 중·일의 경제적 영향력 차이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질서, 규칙기반 질서 수호 명분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데 있음

- 이런 점에서 일본 비판도 규칙기반 질서 수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맞보복을 자제하고, 스스로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모범국으로서 일본을 다루어야 함. 이정환 교수의 글에서 다루었듯이 공공외교 역시 일본 내 여론 주도층인 국제주의 세력을 겨냥하여, 그들의 논리를 활용하는 속에서 수립, 실행해야 함
-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강대국 정치의 비극을 피하려면 규칙기반 질서 수호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견지해야 함. 특히 다자무대에서 like-minded 중견국 연대 노력을 강화해야 함. WTO 수호, 지역제도 강화 등 다자주의 수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국제무대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 미래 국가 비전 및 지역 안보 구조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수반되어야 함. 향후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의 이중 구도가 적어도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면, 다양한 갈등 이슈가 산재할 것이기 때문에 양자 간 협력/갈등 구도도 복잡해질 것임. 따라서 한일 갈등이 민족주의나 자주 문제 등 거대전략 담론으로 쉽게 비화되지 않도록 통제(contain)하는 동시에 역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수준에서의 지역협력 (혹은 양자 협력) 의제들을 풀어가야 함
- 요컨대, 현재 한일관계의 위기 국면에서는 관계 개선을 향한 대내외적 요청이 증가할 것임. 정부는 대일관계를 승자와 패자의 문제로 인식하는 19세기적 발상, 저항적·방어적 사고를 탈피하여, 더 큰 도전에 직면하여 일본을 협력하며 경쟁해야 할 존재로 인식해야 함

❖ 저자 약력**■ 손 열**

現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이며 2019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으로 재임 중.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지역주의, 공공외교.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with T. J. Pempel, 2018),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with Jan Melissen, 2016) 등이 있음.

목 차

1. 한일관계 현상 진단
 - 가. 비정상적 정상화: 장기간 악화상태의 지속
 - 나. 한일 갈등의 확산: 역사에서 정치, 정치에서 경제, 안보 분야로의 확대
 - 다. 국민감정의 악화
2.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4대 요인
 - 가. 위안부 합의 문제: <화해치유재단>의 일방적 해산에 대한 반발
 - 나. 강제징용 재판: 대법원의 징용공에 대한 일 기업의 배상 판결
 - 다. 관함식 욕일기 파동, 화기 관제 레이더 사건
 - 라. 대북 자세를 둘러싼 한일의 온도차
3. 한일관계 이완의 구조적 배경과 관계악화의 직접적 원인
 - 가. 구조적 배경
 - 나. 직접적 원인
4. 일 측 무역보복 조치의 성격과 우리의 대응 방향
 - 가. 일 측 보복적 조치의 성격
 - 나. 대응의 기본 방향
5. 한일 갈등의 핵심, 징용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가. 제1의 선택: 징용 문제 방치-한일관계 극단적 악화로 질주
 - 나. 제2의 선택: 기금(재단) 조성에 의한 해결 추구
 - 다. 제3의 선택: 식민불법+배상포기+피해자 국내 구제 선언
 - 라. 제4의 선택: 국제사법 재판소(ICJ) 공동제소에 의한 해결

대결로 치닫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한일관계 현상 진단

가. 비정상적 정상화: 장기간 악화상태의 지속

- 2012년 이래 악화 지속되고 있음. 2012년에는 ①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②일 천황에 대한 과거사 사죄 요구, ③일본의 국제정치적 지위에 대한 저평가 발언의 세 건이 한일관계를 장기적으로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음. 일본국민은 특히 천황의 과거사 사죄 요구에 대해 크게 반발했음
-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에 의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을 2018년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산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더불어 2018년 10월 30일 일본 징용기업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을 명령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일본 정부와 국민의 큰 반발과 불만을 샀고 이것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도화선이 되었음
- 최근 일본 내 혐한기류가 심각하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 2000년대 이래 일본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50~60%를 상회했으나 2012년 이후 30%대로 떨어졌고 2018년 이후 호감도는 급감하고 있는 추세임
- 과거 한일관계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해 한국이 공세를 취하고 일본이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양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일본이 오히려 위안부, 징용 문제를 들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에 한국이 방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즉, 한일 간 공수가 전환되고 마치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역전된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한일관계의 전개양상이 이전과 180도 달라졌음
-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적 왕래는 여전히 건재한 상황.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인원은 약 720만을 상회하고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인원은 약 270만 명으로 한일 간 인적 왕래의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함. 일본의 경

한일관계**갈등 전선은****과거사 문제에서****외교적 갈등으로****외교에서 경제로,****경제에서****안보 분야로까지 확산**

제 보복 조치 이후 시민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일본 안 가기 운동의 영향으로 9월 이후 일본 방문자 수는 격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일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젊은 세대 내 K-Pop 등 한류에 대한 열풍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10대~20대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정치 외교적 이슈에 무관심하거나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나. 한일 갈등의 확산: 역사에서 정치, 정치에서 경제, 안보 분야로의 확대

- 종래에는 독도, 망언, 위안부, 야스쿠니 등 일본발 역사 문제가 한일 갈등에 원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한일관계 쌍방에서 전방위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양상
-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의 경우, 갈등의 촉발자 역할을 했던 것은 한국 사법부라고 할 수 있음. 즉, 2011년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문제가 기본적 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 위헌’이라고 판결했음. 이어 2012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해당 일본기업은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2018년 10월 이를 재확인하는 최종판결이 내려졌음
- 한편 한일 갈등의 일본 측 원인자는 아베 정부의 이른바 우경화정책과 그에 대한 한국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음. 아베 정부는 2012년 말에 집권한 이래 평화헌법의 개정, 집단자위권의 용인을 허용하는 법제의 도입, 역사수정주의적인 정책 추구, 독도에 대한 주권주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의 강렬한 반발과 저항을 초래하고 있음
- 징용재판의 결과에 대한 한국 측의 무책에 대한 반발로 일본은 마침내 수출규제 강화조치라는 보복적 행위를 자행하였고 한국은 이에 대한 대항조치의 하나로 GSOMIA 종료라는 강수를 두었음. 이제 한일관계 갈등 전선은 과거사 문제에서 외교적 갈등으로 외교에서 경제로, 경제에서 안보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임

다. 국민감정의 악화

- 최근의 한일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음. 한

때 외교관계 단절까지 검토되었던 1970년대 중반 김대중 납치사건, 문세광의 대통령 영부인 저격사건 시의 한일관계와 비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한일관계 갈등은 정부 간 관계에 그치지 않고 국민대중의 감정에까지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존재함. 일본인의 험한 감정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한국인의 반일감정, 정서도 매우 고조되고 있음
- 양국의 국민감정을 더욱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는 데 미디어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일본의 미디어는 문재인 정부를 ‘친북 반일 정권’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음. 한편 한국의 미디어는 ‘아베 악마화’ 프레임으로 아베 정부의 역사 정책, 외교안보 정책, 교육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움

2.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4대 요인

가. 위안부 합의 문제: <화해치유재단>의 일방적 해산에 대한 반발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형 해화를 시도해왔음. 아베 총리는 합의의 준수와 이행을 요구하였고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 합의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합의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제기하였음
- 문재인 정부 하에 설치된 <위안부 합의 검토 Task Force>는 위안부 합의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결론에 따라 정부는 한일합의에 의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방적 해산조치를 내렸음
- 아베 정부는 한국 측의 위안부 합의 형해화 과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거듭된 항의를 해왔음. 아베 총리 개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국내 우익, 보수 세력의 저항을 누르면서 타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정부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배신감과 분노를 깊이 품게 되었음. 이는 아베 정부의 대한국 불신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음
-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 파기, 재협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아베 총리
개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국내 우익,
보수 세력의
저항을 누르면서
타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정부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배신감과 분노*

한국 정부는

한국의 청구권

수해기업과

일 측의 징용기업이

자발적 출연에

의한 자금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일 정부 간

협의를 개시하자는

제안

확언한 부분임. 즉, 합의의 절차나 과정 그리고 내용에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임. 따라서 일본 측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가 한일 정부 차원의 새로운 외교갈등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는 사실은 분명한

나. 강제징용 재판: 대법원의 징용공에 대한 일 기업의 배상 판결

- 강제징용 문제는 당분간 한일관계의 악화를 심화, 확대 재생산시킬 수 있는 역대급 최대 악재로 볼 수 있음. 일본 정부나 기업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지불할 의도가 전혀 없고 대법원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투자 일 측 기업의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강제집행 과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한편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재판이 민사재판이므로 정부가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3권 분립 원칙하에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본기업은 배상에 응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다만 6월 19일 한국 정부는 한국의 청구권 수해기업과 일 측의 징용기업이 자발적 출연에 의한 자금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일 정부 간 협의를 개시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일본 측은 즉각적으로 거부하였음. 이후 한일 정부 간 협의는 재개되지 못한 채 대립이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 징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를 대결 국면으로 끌어갈 최대의 악재임에도 양국의 협상에 의해 문제가 해결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이 우려됨. 징용 문제 해결 없이 한일관계 개선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짐

다. 관함식 육일기 파동, 화기 관제 레이더 사건

- 2018년 말 징용재판과 더불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또 하나의 악재는 제주관함식 육일기 파동과 일본 초계기 화기 관제 레이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제주관함식에 육일기를 게양한 해상자위대의 참가가 우리 당국에 의해 거절되자 일본 측은 크게 반발하였음. 과거 유사한 행사참가에는 육일

기가 문제되지 않다가 갑작스런 거절의사 표명에 일본 측은 불만을 갖게 됨. 한국 측은 국내 정서 및 여론을 고려할 때 욕일기를 단 자위대 함정의 입항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 동해 해상에서 조난 중인 북한 선적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우리 측 구축함과 일 측 초계기가 근접하는 상황에서 사격관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하는 일본과 우리 구축함에 초계기가 근접비행함으로써 위협을 가했다는 우리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갈등이 지속되었음
- 국방부와 방위성은 몇 차례에 걸쳐 보도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반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짐
- 실제로 청와대의 인식은 일본 측이 우리 해군이 사격관제 레이더를 조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국내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자기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 일본 총리관저는 한국 측이 레이더 조사를 했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함
- 사실상 해프닝적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도 예외적이며 한국해군과 일해상자위대 간의 교류와 협력의 경위를 생각할 때 매우 이례적인 사태로 볼 수 있음
- 이는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한일 정부 간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음. 진지한 당국 간 대화가 있다면 얼마든지 수습할 수 있는 일임에도 최고 지도부 간의 외교적 대립사안으로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임

라. 대북 자세를 둘러싼 한일의 온도차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부터 대북 화해협력의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고 잇따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획기적인 대북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동해가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소외되거나 무시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음. 이는 재팬 패싱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음
- 아베 정부와 일본국민들은 문 정부의 대북한 비핵화협상을 한편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체제와 북핵 문제에 대한 깊은 불

*아베 정부와
일본국민들은
문 정부의 ...
이러한 유화적 접근이
너무 순진하거나
북한에 역이용당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함*

정경 엘리트의
세대교체와
한국 정치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더 이상 막후
조정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

신을 지니고 있어 문 정부의 이러한 유화적 접근이 너무 순진하거나 북한에 역이용당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함

-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대북접근에 대한 온도차를 여전히 보이고 있으며 대북정책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크나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국은 북미,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우선하고 있고 일본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민족 문제로서의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안보 문제와 납치 문제, 전후처리 문제로만 북한을 바라보는데서 오는 차이이기도 함

3. 한일관계 이완의 구조적 배경과 관계악화의 직접적 원인

가. 구조적 배경

- 동북아 국제질서의 전환: 중국의 급부상, 일본 힘의 상대적 저하, 미들 파워 한국의 대두로 인한 세력균형의 급속한 유동화 현상
- 한일관계는 90년대 이후 수직적 한일관계로부터 수평적 한일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2010년대 한일관계는 더욱 그러한 변화가 가속화됨
- 한일 정경 엘리트 간 네트워크의 질적 변화도 주목할 만한 변화임.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양국 간 분쟁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정치인, 경제인들이 막후 채널을 통해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가동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그러한 메커니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 정경 엘리트의 세대교체와 한국 정치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더 이상 막후 조정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
- 한일 국가 정체성 충돌이라는 측면이 부상됨. 특히 아베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정권의 체질 혹은 추구하는 국가 정체성 면에서 상당히 다름
- 한국에서는 국내정치의 진영 간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친일-반일 문제가 정치화되는 경향이 나타나 합리적인 대일외교의 수행에 지장이 초래됨

- 한편으로 정치 민주화, 인권의식의 고양, 시민사회의 성장, 민(국가 피해자 그룹)의 강력한 힘이 표출됨으로써 강경한 대일정책을 추동하게 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특히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정계의 보수화, 상대적 국제지위 하락에 따른 관대한 국제 인식의 실종, 경제 침체에 따른 사회 심리적 불안의 확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2012년 아베 정권의 재등장 이래 국가주의적 정책 추구는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평화헌법 개정의 움직임, 안보정책에 있어서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법제의 정비, 교육과 역사정책에 있어서 역사수정주의 경향의 강화, 강성 영토정책의 추구 면에서 국가주의적 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나. 직접적 원인

- 한일관계의 악화 원인은 먼저 양국의 상호인식(미디어)에서 찾을 수 있음. 즉, 상대방에 대한 오해, 편견, 무지의 극대화, 상호이해 노력의 부족이 한일관계 악화를 추동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리더십 요인도 한일관계 악화의 큰 요인이 되고 있음. 한일 지도부 간 소통과 대화의 부재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 제대로 된 한일 정상회담은 2011년 교토 이명박-노다 정상회담 이후 개최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다자회담 속의 한일 정상의 면담을 제외하면 공식적인 의미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8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개인 간의 신뢰와 대화도 매우 부족한 편. 사실상 정상 간 진지한 대화 채널은 두절된 상태로 보임. 청와대와 총리관저 사이의 대화 파이프는 사실상 가동하지 못하는 상태임
- 외교 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 파이프도 예전에 비해 훨씬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최고 지도부 간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서 당국 간 대화 채널도 좁아졌다고 할 수 있음
- 한일은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 내지 비중을 과거에 비해 훨씬 낮게 평가하고 있음. 가령 무역의존도만 보더라도 일본은 한국에게 무역상대국 5위 국가이고 한국은 일본에게 3위 국가가 되었음

*상대방에 대한 오해,
편견, 무지의 극대화,
상호이해 노력의
부족이 한일관계
악화를 추동하는 원인*

일본 정부가 70년간**금과옥조처럼****지켜왔던 정경분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며****매우 이례적 조치 ...****아베와 아베 측근****경산성 마피아들의****합작품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의 일본 인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아베 정부는 건설적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심지어는 방해세력이라는 인식이 문재인 정권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신남방, 신북방 정책으로 대외전략의 중점을 이동시키고 있음. 남북으로 외교적 외연을 확장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한국 인식도 역시 변화하고 있음.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을 주장하면서 일본은 대미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포위망 구축을 추구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애매한 위치가 됨
- 미국-호주-인도-동남아 지역을 잇는 이른바 해양국가 동맹 구축을 핵심적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음
- <외교청서>, <방위정책의 대강> 등 일본 정부의 정책문서에서 한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나라”,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한 근린국가”라는 기술이 점차 희미해지거나 삭제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신 에치슨라인’ 밖에 존재한다는 식의 논법도 보수 우파의 담론에서는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4. 일 측 무역보복 조치의 성격과 우리의 대응 방향

가. 일 측 보복적 조치의 성격

-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3부품에 대한 수출규제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위안부합의 형해화, 징용재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책에 대한 분노가 폭발함으로써 내려진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이는 일본 정부가 70년간 금과옥조처럼 지켜왔던 정경분리 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매우 이례적 조치로 볼 수 있음. 무도하고 비열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임

- 이 조치는 아베와 아베 측근 경산성 마피아들의 합작품으로 볼 수 있음. 일본 정부의 각성청의 관료집단이 내린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일본의 주요 미디어의 사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의 비판을 받았음. 따라서 이 조치에 대한 일본 국내지지 기반이 강하다고는 볼 수 없음
- 재량권, 칼자루(수도꼭지)를 쥐고 흔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 일종의 엄포 금수조치는 아님, 재량권 발동하게 되면 사실상 금수조치에 가까운 효과 날 수도
- 자유공정무역 규범에 저축, 70년간 일본 스스로 지켜온 국책과도 모순, 국제사회 지지 어려운 선택(준법 투쟁적인 요소, GATT 21조 원용)
- 한국경제 공격행위, 기술패권 전쟁의 시작이라는 진단은 성급한 판단이며 한일 경제전쟁으로 보는 패러다임도 너무 거시적, 추상적 진단

나. 대응의 기본 방향

- 한일 갈등이 놓여 있는 국제정치적 맥락, 동북아 국제관계의 문맥 속에서 사태를 진단하고 해법을 추구해야 할 것임
- 마치 진공 속에서 한일 양국이 이익을 쟁투하는 양상처럼, 두 개의 당구공이 부딪치는 전쟁이 벌어진 상황은 전혀 아님
- 한국이 처한 국제정치적 상황과 우리가 추구할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이 사태에 대처해야 할 것임
- 국산화가 해법이 될 수 있는가, 글로벌 공급망, 제조업의 국제분업 구조가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인가를 감안해야, 국제경제체제가 당장 중상주의로 회귀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과 해법이 추구되어야 할 것임

**한일 갈등이
놓여 있는
국제정치적 맥락,
동북아 국제관계의
문맥 속에서
사태를 진단하고
해법을 추구해야**

5. 한일 갈등의 핵심, 징용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가. 제1의 선택: 징용 문제 방치-한일관계 극단적 악화로 질주

-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압류-처분금지-매각-현금화-배상지급(신일철의 포스코 주식, 미츠비시 특허권의 현금화?) 현

일본 정부와**일본 내 여론은****일 기업의****자금조성에****반대하고 있어,****일 기업의 행동에****큰 제약이****걸려 있는 상황**

금화의 시기는 2020년 1월경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금화는 곧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으로 여겨짐(현금화되면 일 측의 보복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차원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정부의 보복(대항) 조치: 현재 취해진 수출규제 강화 조치, 화이트리스트 배제 외에 금융보복 조치, 관세보복, 비자발급 제한, 송금 제한, 일본 내 한국자산 일시 동결 조치 등이 예상
- 아베 정부는 각 성청으로부터 약 100여 아이টে에 이르는 보복 항목을 제출받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장기적인 한일 경제전쟁으로 비화, 국민감정 동원한 대대적인 한일 갈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산업, 경제에 주는 타격과 피해는 막대하고 장기화될 것임
- 더불어 일본의 산업-경제에 주는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됨
- 피해의 한일 비대칭성에 유의해야 할 것임(기본적으로 일본은 내수경제, 한국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임에 유의해야 할 것임)
- 더불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제조업의 국제공급망, 산업의 국제분업 구조)에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제 경제질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나. 제2의 선택: 기금(재단) 조성에 의한 해결 추구

- 6월 19일 외교부의 제안: 한 청구권 수혜기업+일 징용기업의 자발적 자금 거출에 의한 피해자 구제 방안 제시, 일 측 즉시 거부
- 일본 정부는 이 제안으로 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 징용기업이 기금조성에 자발적으로 협력할 가능성도 별로 없음. 일본 정부와 일본 내 여론은 일 기업의 자금조성에 반대하고 있어, 일 기업의 행동에 큰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
- 기업+기업 안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추가된 진전된 안이 마련된다면 협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음
- ①피해자 그룹과의 조율, ②청구권 수혜기업과의 협의, ③피해자의 수

및 배상액의 규모가 가늠되고, ④법원의 소송 시효 판단이라는 4대 요소가 충족될 때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있음. 더불어 ⑤2007년 특별법에 의한 조치와의 형평성(보훈정책과의 균형)을 담보해야 함.

-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의해 <화치재단>을 구성하여 해결에 임했지만 불완전 연소로 끝났다는 점을 상기하면 해결책으로서의 기금 방식의 한계를 잘 알 수 있음(일본 측은 기본적으로 기금방식에 의한 해결에 회의적임)

다. 제3의 선택: 식민불법+배상포기+피해자 국내구제 선언

- 정부가 특단의 성명 발표로 문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3개 사항으로 구성되는 특별성명 발표
 - ①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점, 일본은 사죄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함
 - ②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일 배상, 보상 등 일체의 물질적 요구는 영원히 포기할 것임
 - ③모든 식민지배와 연관된 피해자의 구제 문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하에 수행할 것임
- 물질 배상요구 포기하고 정신적 역사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 외교가 가능
- 중국이 일본에 대해 행한 전후처리 방식임(이덕보원, 배상포기). 일본은 중국에 속죄하는 의미로 방대한 대중 ODA 실시했음
- 위안부 문제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1993년 선언도 이와 같은 해법: 당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일본에 진상규명+사죄반성+후세에 제대로 된 교육을 요구하고 피해자 구제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할 것임을 선언)
- 창의적 발상에 의해 한일관계의 국면을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해법이 될 수 있음(한일 양 국민이 윈-윈할 수 있는 해법)
- 물론 이 성명에 앞서 피해자 그룹과의 사전조율은 필수,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물밑 대화가 선행되어야

**물질 배상요구
포기하고
정신적 역사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 외교가 가능**

양국의**최고법원 판결이****상이하므로****제3의 국제사법기관의****판결로 최종 결론****내는 것도****평화적 분쟁 해결방식****라. 제4의 선택: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에 의한 해결****1) 해결의 가능성 및 전망**

- 최종결론이 날 때까지 3~4년 이상의 시간 소요: 공동제소한다면 일종의 한일 간 전쟁을 휴전시킬 수 있는 효과 기대됨. 강 대 강의 대결 구도를 차분하고 냉정한 법리 논쟁의 구도로 전환시킬 수 있음
- 양국이 합의하면 한국에서의 법적 강제집행을 보류할 수 있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도 사실상 철회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임
- 양국의 최고법원 판결이 상이하므로 제3의 국제사법기관의 판결로 최종 결론 내는 것도 평화적 분쟁 해결방식이 될 수 있음
- 재판과정에서 일부승소, 일부패소의 가능성이 명확해지게 되면 양국의 화해에 의한 해결책을 도출할 가능성이 존재함
- 재판관은 16인으로 구성됨. 15인의 재판관 구성—아시아 3명, 아프리카 3명, 중남미 3명, 동유럽 2명, 구미 4명에 한국 정부가 지명하는 재판관 1명이 추가됨
- 결과는 일부승소, 일부패소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큼. 일방적 패소는 있을 수 없음
- 특히 개인의 인권, 권리를 중시하는 국제법의 진화 양상을 고려할 때 반인도적 상황 하에서 이뤄진 강제노동 피해자의 권리를 국가 간 합의에 의해 완전히 소멸할 수 없다는 법리가 준용될 가능성 매우 높음
- 재판은 피해자의 구제를 둘러싼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도록 제소하는 것이 마땅함
- 패소 시의 후폭풍을 염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이 승소하면 일본 기업이 배상을 지불하게 되고, 패소하면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구제를 대행하게 되는 것일 뿐임
-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소해 올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존재하나 그런 염려를 할 필요 전혀 없음.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이 공동 제소하지 않는 한 재판할 수 없음. 즉 한국은 강제관할권을 수용한 적이 없음

2) 개인 청구권 문제

- 일본의 최고재판소(2007년 니시마츠 판결)는 피해자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를 청구할 권능이 없다고 판시
- 일본 외무성(1991년 야나이 조약국장 발언, 2018년 고노타로 외상 발언)의 입장: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되었으나 원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님. 다만 그 권리는 행사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
- 한국의 대법원 판결: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고 불법적 식민지배하에서 이뤄진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배상)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
- 한국 정부(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입장: 법리론과 정책론의 혼재 상황
 - ①대일 외교정책론: 위안부, 사할린 교포, 원폭 피해자 3대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게 법적인 추구를 할 것이나 징용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 이 결론에 따라 2007년 특별법 제정하여 징용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실시함(6,300억 원 규모)
 - ②법리론: 청구권 협정에 의해 징용피해자의 청구권 요구에 대해 정부의 외교보호권은 소멸되었으나 개인 청구권 그 자체는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기술이 존재함. 일본 최고법원도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소멸되었다고 할 리는 없음. 다만 그 권리를 법적으로 추궁할 외교적 의도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한일 양국 정부 및 대법원, 최고재판소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징용피해자의 권리(청구권)는 국가 또는 국가 간 합의에 의해 결코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는 공통향이 존재
- 개인의 인권 및 권리를 존중하는 국제법의 진화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원 권리는 국가 간 합의로 결코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도 달할 것으로 판단됨(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 그렇다면 피해자 권리(청구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임

3) 식민지배 불법성 문제

- 양국이 공동제소할 경우 핵심 쟁점은 피해자 구제의 여부 및 방법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ICJ는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정면으

한일 양국 정부 및 대법원, 최고재판소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징용피해자의 권리(청구권)는 국가 또는 국가 간 합의에 의해 결코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는 공통향이 존재

**국제사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이
다소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피해자 구제의 시비를 따지기 위해 식민지 불법성 여부를 부수적으로 심의할 수는 있을 것임. 이 경우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판단하여 식민지배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손실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음. 왜냐하면 21세기 국제사회가 도달한 규범에 따르면 식민지배가 불법이니 배상하라는 식의 판결이 나온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임
- 다만 징용이 국제법이 금하고 있는 반인도적 강제노동(준 노예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판단의 중심적 기준이 될 것임
- 식민지 불법성 문제에 관해 한일 양국의 입장(헌법, 한일기본조약 비준 국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관되게 대립, 병행되어 왔음. 즉, 한국의 입장은 일관되게 불법(부당 불법론)이라는 것이고 일본 측의 입장은 불법은 아니라는 것(부당 합법론)임. 이러한 양국의 입장은 ICJ의 어떠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변하지 않고 견지될 것임

<참고사항> 유사 사례의 보상금 책정은 어떻게 되었나?

-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징용피해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위자료는 1억 원 내외임. 실제로는 지연금을 포함하여 1인당 2억 원가량이 지불될 것으로 추정됨
- 강제징용과 유사한 국제적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 금액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
- ① 나치 독일의 폴란드인 강제노동자 문제에 관해서 2000년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기억 책임 미래 기금>을 설립하여 정부와 관련 기업이 각 50%씩 공동출자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970만 명 중 생존 피해자 150만 명에 한해 15,000마르크(약 1,100만 원)를 지불하였음
- ② 미 클린턴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의 협조를 우려하여 강제로 감금조치했던 일본계 미국 시민들에 대해 20,000달러(약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였음
- ③ 일본 정부는 식민치하에 있던 대만인 출신 일본군 병사들에 대한 보상금 조로 200만 엔(약 2,000만 원)을 지불하였음
- 이러한 제 국제사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이 다소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7년 특별법에 의해 지불된 지원금의 경우, 사망 피해자에게 2,000만 원, 부상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그리고 생환 피해자에게 병원비 조로 연 80만 원이 지불 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저자 약력

■ 이원덕

現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 취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거쳐 국민대학에 부임. 현대일본학회 회장(2015년) 역임, 외교부, 통일부,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평통 등 자문위원 역임. 주요 논저로는 『한일관계 50년: 제1권 정치』(공편, 2015), 『한일관계50년의 성찰』(공저, 2017), 『질곡의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 2017) 등이 있음.

Internationalism in the Abe Cabinet's Diplomatic Strategy and the 2019 Korea–Japan Disputes

LEE Junghwan

(Associate Professor of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be Statement in 2015 shows that internationalism is more visible than historical revisionism in the Abe Cabinet's history policy. While historical revisionism emphasizes Japan's traditions and unique values, internationalism upholds the significance of universal values in the world. The Abe Cabinet's history policy never targets the Asian countries and their people, but only the American government. The transition of the Abe Cabinet's history policy toward internationalism in 2015 was an effective solution for the American government's lack-of-confidence on Abe and his Cabinet around 2013. In addition, Abe's turn to internationalism became a momentum for getting more supports within Japan. Since, however, internationalism is a product of Japan's pragmatic diplomatic approaches, there will be a chance of Japan's changing attitude on Korea in the gradual pac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Structure and Prospect of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OHN Yul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Yonsei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2010s, on the one hand, has seen both the rise of nationalism and populism and an increase in anti-liberal regulations in response to neoliberal globalization. The export restrictions imposed on South Korea's key export items by the Abe administration reflects the global trend known as the "State of Chaos" in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By making use of a nationalistic tradition to address its relative decline due to the wave of globalization, the Abe government is pursuing retro-identity politics in a nostalgic attempt to revive the glory of the imperial Japan. This has, inevitably, led to the development of a form of ontological instability and is seen as a threat by South Korea's own ardent nationalists. This, of course, results i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nationalisms that spawn from competing national interests. As the current Seoul-Tokyo conflict manifests the structural features of such an identity clash, the situation will be prolonged. South Korea should criticize Japan in terms of order protection based on the liberal rules while making diplomatic efforts to have Japan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In order for these diplomatic efforts to be internationally persuasive, South Korea should serve as an example of a nation that abides by the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Korea–Japan Relations going into Confrontation: How do you Solve them?

LEE Won-Deog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Kookmin University)

As of September 2019, Korea-Japan relations are said to be the worst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The deterior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is a phenomenon that has emerged as a result of the structural shift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transition of the nature of bilateral relations from vertical to horizontal. It also has to do with the gap in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two governments and the process of reducing the strategic priorities of the other side.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Supreme Court's trial of conscription and Seoul's impunity in providing factors that push the bilateral relationship to the brink. The Abe administration has aggravated the relations between Seoul and Tokyo by taking retaliatory measures such as stricter export regulations in protest and anger.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reasonable solution to the conscription issue in order to improve the Korea-Japan relations in the future. Given that there are ways to deal with the fund system, file a joint complaint with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declare the waiver of material compensation, each option has its own merits and demerits, the government should start to resolve the conscription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interests and strategies.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Past, Present and Future: Seeking for Solutions 2019

- 3 <Opening Article> Japan and South Korea's Interests
in the Export Control Negotiation
SAITOU Kousuke (Associate Professor, Yokohama National University)
- 13 Internationalism in the Abe Cabinet's Diplomatic Strategy
and the 2019 Korea-Japan Disputes
LEE Junghwan (Associate Professor of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 25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Structure
and Prospect of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OHN Yul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Yonsei
University)
- 35 Korea-Japan Relations going into Confrontation: How do you Solve them?
LEE Won-Deog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Kookmin University)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